

# ‘맹탕 국감’ 지적에도… ‘김건희 vs 이재명’ 맹공 이어질 듯

법사위, 오늘 대검찰청 국감 실시  
野,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집중질의  
輿, 이재명 ‘재판지역’ 의혹 주장

3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국감)가 민생 논의가 두드러지지 않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주 종합감사에 들어가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국감 기간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질의한 내용을 재점검하는 종합감사에서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각과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질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여야의 격전지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연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검찰청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질문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다. /뉴스시스

대한 국감이 실시되기도 전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종합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대검찰청 주요 수뇌부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법사위의 주요 화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게 지역구를 바꿀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의힘 제22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당시 대선 경선 후보)에게 제공하고 그 여론조사의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엔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각급 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지연’ 의혹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결심을 마치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1·2·3심이 1년안에 선고를 마치고 규정이 돼 있는데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1심 선고

까지 2년 이상 걸린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검찰청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씨의 타이스트라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국내 주요 기업 대표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국감 증인엔 김동관 한화그룹 전락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피터안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피터 알 텐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韓, 오늘 면담서 ‘김건희 리스크’ 등 당정관계 향방 결정

독대 아닌 정진석 동석한 차담 형식  
韓 “변화·쇄신 필요성 등 논의할 것”  
尹, ‘모든 요구 수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마주 앉는다. 두 사람이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로 꼬인 당정관계와 여권 전체의 리스크가 된 ‘김건희 리스크’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의 특별한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일정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달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영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찬에서 두 사람의 독대는 없었다. 대신 재·보궐선거 이후 만나기로 별도로 협의했다.

다만 약 한 달만에 이뤄진 이번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사용하던 용어인 ‘독대’가 아닌 ‘면담’이라고 표현했고, 만남도 독대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동석한 차담

형식이 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당정관계의 향방이 결정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는 여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고리로 탄핵을 주장하는데,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야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 대표가 이 자리에서 직접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게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두고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인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한 대표 및 여권 일각에서 ‘한남동 라인’을 언급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두 사람 간 만남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한 대표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표는 당정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윤 대통령은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을 공간이 크다. 이에 제2부속실 설치나 개각, 참모진 개편 등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깊어진 골을 메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그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여러 차례 올라온 바 있는데, 이번 면담 역시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간 한 대표가 언론을 통해 독대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에 동석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시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예진 기자 syj@

## 민주당, ‘反정부’ 여론조성 강화 나서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을 이용해 장내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가운데, 다음달 2일부터는 장외에서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검토하겠다는 반(反)정부 여론 조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격분하며 장외투쟁을 전면으로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범국민대회에 시민단체와

의 결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법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결국 목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직접 언급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후원회’ 행사를 주관해 논란이 된 바 있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했다. 또 “탄핵을 당할 것인가. 사퇴할 것인가. 신중히 선택하라”고 했다.

다만,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한 번도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번 국감에서 봤듯이 (여당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을 서슴치 않고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차원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 “SMR 4기 건설,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대통령실 “연말에 발표할 예정”

대통령실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건설 방안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350MW(메가와트)인 SMR를 4개 정도 묶어야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수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며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과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SMR는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이라서”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SMR는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를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